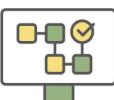


## 성과요약서

**끝까지 추적한다: 디지털 자산과 국경 없는 체납 징수****추진  
개요****▣ 배경 및 필요성**

- ▶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신종 체납 수법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
- ▶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증가 및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대두
- ▶ 고의적·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,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'투트랙(Two-Track)' 징수 전략 필요

**▣ 추진 전략**

- ▶ 신종 징수: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하여 체납자의 숨은 코인(Coin) 추적 및 압류
- ▶ 사각 해소: 외국인 등록정보 현행화 및 '영어 체납 고지서' 발송 등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
- ▶ 상생 징수: 11~12월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시,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및 분납 유도

**추진  
성과****▣ 서울시 자치구 최초,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1억 4천만 원 징수**

- ▶ 추진내용: 2025년 상반기 5대 거래소(업비트, 빗썸 등) 대상 체납자 보유 계정 조회 및 압류
- ▶ 징수실적
  - 압류: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총 2억 1천만 원 상당 압류
  - 징수: 압류 후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1억 4천만 원 징수
  - 사례: 고액 체납자 A씨, 가상자산거래소 직접 동행하여 1억 2천만 원 즉시 징수

**▣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 및 징수 사각지대 해소**

- ▶ 추진내용: 과년도 외국인 체납자 2,175명(체납액 5억 원) 대상 전수 조사 및 주소지 현행화
- ▶ 징수실적: 거소지 불명자 추적 및 영문 고지서 발송을 통해 166명, 3천 7백만 원 징수
- ▶ 제도개선: 외국인 비자 연장 시 지방세 납부 증명 의무화 등 법령 개정 건의 병행

**▣ 고액·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**

- ▶ 강력징수: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, 출국 금지, 가택 수색 등 행정 제재 강화
- ▶ 회복지원: 영세 사업자·생계형 체납자 대상 번호판 영치 보류 및 분할 납부 승인

**기대  
효과**

- ▣ “디지털 자산도 압류된다”는 인식 확산으로 조세 정의 실현 및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
- ▣ 외국인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